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관련 포상 및 제재 지침

제정 2024. 12. 2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규정”이라 함)에서 정한 포상, 제재조치 및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 인사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임과권한) ①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위반자(조직)에 대한 제재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우수자(조직)에 대한 적절한 포상 등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CP전담부서는 공정거래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우수자(조직)에 대한 포상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포상 및 제재조치 현황을 인사기록과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율준수위원회는 GRI 청렴위원회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포상조치 업무절차) ①포상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CP전담부서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우수자(부서) 등 보고
2.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인사총무부에 포상자 추천
3.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포상 시행
4. 포상에 대한 사항 사내 공시

②CP교육 및 점검(평가) 결과 우수 직원(부서)에 대한 포상자 추천은 자율준수위원회 심의없이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CP관련 포상자에 대해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포상기준) ①포상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협의를 또는 제보의 결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예방에 공로가 큰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준수로 CP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3. CP점검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준수정도가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CP교육시 평가결과 최우수자 또는 부서

②구체적인 포상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6조(제재의 원칙) ①임직원이 직무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사항의 점검결과 적발된 법 위반자에 대하여 법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제재조치의 업무절차) ①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CP전담부서가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2.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거나 자율준수위원회 심의결과 징계로 판단된 경우 인사총무부에 통보하고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4. 제3호의 경우 인사총무부는 징계절차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CP전담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
5. CP전담부서는 제재조치가 확정되면 사내 공시하여야 한다.
- ②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자율준수위원회 심의없이 CP전담부서를 통하여 경고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⑤전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직원 또는 조직의 책임자는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CP전담부서를 통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CP 관련 제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재의 종류 및 기준)

-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재절차를 자율준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사건화된 경우로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연구원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킨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사건화된 경우로서 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위반소지가 커 향후 연구원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안임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 ② 경고
 1. 공정거래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2.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3. CP 관련 점검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시정요구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 ③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가 담당부서장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와 부서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내부제보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법 위반자가 속한 부서에 대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위반 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징계는 과실 정도가 고의거나 크며, 업무 관련 영향이 중대한 경우를 말하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연구원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연구원 경영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4.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⑤임직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 ⑥인사제재의 유형 및 최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CP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CP전담부서는 임직원의 CP교육이수를 독려하며 최종 미이수자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보호) ①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관련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보 관련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보자 신분
2. 제보자 제시증거 및 기타 정보수집
3.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
4. 포상내역

③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탐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전담부서에 노출 경로를 조사하도록 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컴플라이언스팀이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한다.

제11조(타 규정에 대한 보충적 적용) 본 규정의 연구원의 다른 규정과 충돌할 경우 타 규정이 우선한다. 다만, 본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요청에 의해 자율준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며 어느 규정이 우선할 지에 대해 자율준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2024. 12.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관련 인사제재 유형

징계사유	과실정도	업무관련 영향 등	양정**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고의, 중과실	업무관련 영향이 중대한 경우	징계***
		업무관련 영향이 경미한 경우	경고
	경과실	업무관련 영향이 중대한 경우	경고
		업무관련 영향이 경미한 경우	교육

* 공정거래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 모든 제재에는 시정요구를 함께 취할 수 있다.

*** 위반의 정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